

統一問題심포지움  
1987. 11. 26

國統調 87-11-77

# 周邊民族과의 競爭戰略으로서의 統一

1987. 11.

國土統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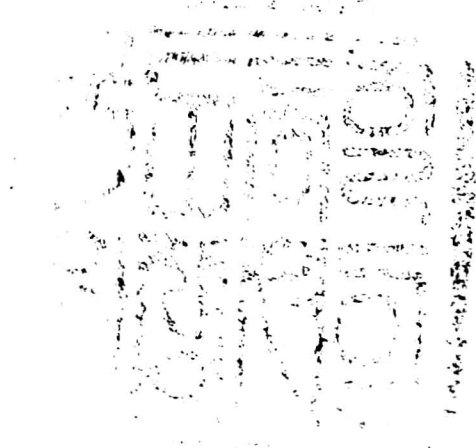


統一問題심포지움  
1987. 11. 26

國統調 87-11-77

# 周邊民族과의 競爭戰略으로서의 統一

1987. 11.



國土統一院

# 目 次

|                         |   |
|-------------------------|---|
| I. 民族興隆의 成敗와 統一展望 ..... | 3 |
| 安 秉 俊 (延世大 教授)          |   |

|                               |    |
|-------------------------------|----|
| II. 對北包容政策의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 21 |
| 鄭 鎔 碩 (壇國大 教授)                |    |

# I. 民族興隆의 成敗와 統一展望

目

次

|                          |    |
|--------------------------|----|
| 1. 民族興隆의 成敗 .....        | 5  |
| 2. 統一論議의 分裂과 政治化 .....   | 8  |
| 3. 超黨的 新國民的 合意의 必要 ..... | 13 |
| 4. 民族共榮體의 形成과 統一展望 ..... | 17 |



## 1. 民族興隆의 成敗

한 民族興隆의 成敗는 그 민족이 統一과 團結을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韓民族의 興隆도 統一을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民族의 숙원인 統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南韓에서 民族統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진실로 統一과 團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統一問題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 民族이 再統合하여 하나의 民族國家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 상태가 이룩되는 것은 하나의 結果와 當爲로서의 統一이다. 이것이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統一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統一로 가는 그 과정과 방법이다. 어떠한 方法에 의해서라도 統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統一은 平和的으로 그리고 온 民族構成員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民主的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왕왕이 잊기 쉽고 그 결과 統一至上主義的인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소원하는 統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요건중 가장 核心的인 것은 南北韓이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民族自決主義原則에 따라 統一에 대한 合意를 이루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南北韓當事者間의 合意에 대하여 주변강대국들이 合意에 도

달하거나 적어도 理解하고 受容해야 南北統一이 安定과 持續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內外的인 요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大韓民國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한가지 더 있다. 그것이 곧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南韓內에서 統一의 內容과 方法에 대하여 意見統一과 團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小考의 核心的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統一問題에 관한 民族主義的인 차원에서 새로운 國民的인 合意를 구성해야 하며 統一을 촉진하는 과정으로서 南北韓兩側의 生存과 繁榮이 함께 보장될 수 있게끔 「民族共榮體」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小主題 몇가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1987年을 기점으로 오늘의 韓國社會에서는 統一論議가 점차 分裂되고 政治化하여 종전에 볼 수 있었던 國民的 合意가 와해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現實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國內外狀況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시 統一에 대하여 超黨的이고 舉國的인 새로운 國民的合意를 구성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한 合意構成努力의 일환으로서 南北韓의 安保, 國際的承認, 經濟繁榮 및 正統性이 함께 보장될 수 있겠끔 「民族共榮體」를 형성하여 그것을 統一로 가는 前段階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展望은 南北韓이 먼저 平和共存을 성취하고 協商과 協力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며, 相扶相助의 정신으로 經濟交流 및 協力을 추진한 뒤 마침내 民族自決과 和解의 정신으로 合意에 의하여 單一民族國家를 형성하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統一展望을 現實化하기 위해서는 統一論議에 있어서 一貫性, 「受容的 抑止」 또는 「先制讓步」, 實現可能性 및 自信感を 증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거쳐서 統一에 대한 超黨的인 新國民的 合意를 재구성하는데 다소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필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앞으로 合意는 國民의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定義되어야 할 것이다.

## 2. 統一論議의 分裂과 政治化

1960年代 및 1970年代 初期까지 韓國에서는 대체로 「反共」이나 對話를 통한 段階的인 統一原則에 대하여 하나의 合意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年代 後半과 1980年代에 들어와서 統一論議에 對한 國民的인 合意는 점차로 와해되고 오히려 各樣各色的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統一論議 그 자체가 分裂되고 있을 뿐 아니라 同時에 政治化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그동안 發生했던 國內外與件이 變化한 결과 초래된 것이다. 韓國人口의 70%以上이 1945年 以後에 태어났고 또 6.25를 몸소 겪어보지 못했던 새 世代를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은 구세대의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오랜 동안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가 굳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이에 항거하는 疎外勢力도 성장해 왔다. 이들은 民主와 民衆의 이름으로 統一論議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해 왔다.

한편 國際環境도 급전하여 韓半島의 分斷에도 불구하고 強大國들은 자기들 상호간에 관계를 정상화 또는 개선해 왔다. 이것은 南北韓間에 外交競爭을 심화했고 더 이상 韓半島의 分斷이 強大國關係의 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를 촉진해 왔다.<sup>1)</sup> 이처럼 冷戰이 해소되고 자못 느슨한 強大國關係가 시작되자 國內에서는 美國이 分斷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심지어 美軍撤收를 요구하는 反美感情도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1) 이에 대해서는 安秉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安保論」(서울: 法文社, 1986), p.267 참조.

이렇게 사태가 진전하자 統一을 政治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爭點으로 삼으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모든 동향은 社會와 世界가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統一論議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變化가 統一論議를 分化시키고 分裂시키며 나아가서 政治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볼 필요가 있다.

### (1) 分裂과 兩極化

統一意識이 分化되면 될수록 統一論議도 分裂되고 兩極化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하여 오늘에 있어서 統一論議는 점차 세대와 계층간에 分裂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띄면서 急進主義와 保守主義間에 兩極化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것은 統一에 대하여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世代間에 인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統一에 대하여 그동안 韓國政府가 견지해 온 정책을 비판하고 반발해 왔으며 반대로 年老하면 할수록 그것을 지지해 왔다.

國民들 중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統一에 대하여 既存政策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에 있어서 다소 無批判的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統一이 우리의 生存과 自由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反共과 戰爭抑止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원한다. 특히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은 現實主義的인 입장에서 政府의 統一政策을 그대로 受容해 왔다.

최근에 와서 統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의 입장도 두둔하는 견해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急進主義者들은 심지어 金日成의 「고려연방」안도 支持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갖고 自由를 수호하며 反共을 계속하면서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統一을 옹호하는 세력이 집결되고 있다. 이 결과 統一論義는 보다 소리 높게 조직되고 있는 急進保守 양 세력간에 兩極化되고 있는 것이다.

## (2) 統一至上主義와 「民衆統一論」

급진주의적인 統一論議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두 내용은 곧 統一至上主義와 民衆統一論이다. 양자는 서로 상관되고 있으며 統一에 대하여 매우 강렬한 公約과 感情을 표시하는 입장이다.

統一至上主義는 무엇보다도 統一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 目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達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分斷은 모든 歪曲의 근본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先統一 後民主化」를 내세우면서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統一없는 民主化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既成世代의 統一觀을 불신하는 이들은 이른바 「民衆統一論」을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既成世代와 政府는 기득이익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反共과 安保를 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억눌림에서 희생되어 온 勞動者와 農民, 卽 「民衆」이 統一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南과 北에 있는 「民衆」이 직접 만나서 의논하면 民族

統一이 쉽게 성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政府는 「民衆革命」에 의하여 전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反美와 排他主義

既存의 統一論議에 대하여 비판하는 眼目중에서 최근에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또 하나의 思潮는 곧 反美와 排他主義이다. 分斷에 대하여 美國이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美國은 韓半島問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見解를 피력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 중에는 美軍을 「傭兵」 또는 「占領軍」이라고까지 성격짓고 있다. 이들은 특히 核武器는 韓國人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에 갖다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反美主義와 함께 蘇聯·中共 및 日本등 모든 外勢가 韓半島에서 배격되어야 하며 그 결과 韓半島統一은 순전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매우 排他的인 民族主義의 표현이며 다분히 감정적인 반발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美國을 포함한 外勢가 統一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外세가 축출되면 곧 民族統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 (4) 黨爭化와 政治化

이상과 같이 統一論議가 분열되고 양극화하자 그것이 政治에도 반영되어 以前에 비하면 統一이 黨爭化하고 나아가서 政治的인 爭點으로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統一政策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다른 表現과

강조점이 제시되면서 自己派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現實政治에 가담하고 있는 人士들중 일부는 위에서 지적한 「民衆統一論」이나 「統一至上主義」 그리고 反美感情을 공개적으로 主唱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階層과 젊은 世代에게 호소력을 갖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韓半島의 非核地帶化가 政黨의 公약중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統一 및 安保論主義가 점차로 政治化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현상은 종전과 비교할 때 1987年의 大統領選舉戰에서는 統一政策이 보다 강도있게 취급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각 政黨이나 政派가 다소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띄면서 統一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試圖하려는 모습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試圖를 해 봄으로써 감정적으로 同調者와 支持者들을 획득하려는 면도 있다.

이처럼 統一論議가 政治化되고 있는 것은 西獨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西獨에서는 社會黨과 基督教民主黨이 번갈아 집권했지만 그들의 이른바 「東方政策」이나 「西獨政策」에는 큰 갈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교적으로 超黨的인 卽 民族主義的인 공동전선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統一問題가 政治爭點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곧 이에 대한 合意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3. 超黨的 新國民的合意의 必要

우리는 分裂되고 政治化되고 있는 統一論議를 주어진 현실로 일단 보고 그 바탕위에서 다시 超黨的 國民的 合意를 探索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民族興隆의 길은 불가능하며 마침내 統一展望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否定的인 현실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團結과 合意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 統一論議에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하게 실로 民主的인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오늘의 국제 환경에서 自主와 國際協力을 조화하여 보다 統合的인 民族主義를 창조적으로 모색해야 國家安保와 民族統一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統一論議는 非政治化하여 진실로 超黨的이고 舉國的인 視角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團結과 合意

分裂과 兩極化를 해소하고 統一에 관한 한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團結과 合意가 기어코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들 사이의 統一이 없이 南北韓間의 統一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民族統一의 內容과 方法에 대하여 큰 異見이 있을 수 없다. 우리 民族이 平和的으로 또 自由롭게 재통합하여야 한다는 當爲의 대해서는 쉽게 合意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當爲가 실제로 달성되는 데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制約도 있으므로 문제는 이 현실을 인식하는데서 생기는 異見과 葛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統一에 대한 認識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탄 없는 討論과 意思疎通을 통하여 대다수의 國民들이 어느정도의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곧 團結과 國民的合意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2) 統一論議의 民主化와 現實主義

위에서 강조한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合意와 團結이 이루어지려면 統一論議가 民主化되고 또 現實主義的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이른바 「民衆統一論」과 統一至上主義를 지양하는데 필요한 자세이다.

대체로 기존의 統一論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은 그것이 非民主的으로 진행되었다는데 비롯한다. 卽, 政權維持와 既得權을 누리기 위하여 統一論議를 일정한 계층에게만 국한시켰고 이른바 「民衆」을 그것에서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이제 民主化가 國民의 餘망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이때 統一論議도 民主化되어야 한다. 이 말은 統一政策의 입안과 결정의 과정에서 國民의 各계各층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對話와 討論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비록 과격하고 急進主義的인 의견의 표현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基層民衆」뿐만 아니라 中産層과 知識人등 모든 관심있는 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격의없는 교류를 통하여 合意點을 찾고 大聯合體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民主化와 더불어 統一論議는 現實主義的인 감각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統一만 된다면 모든 歪曲과 疎外가 다 해결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統一至上主義는 매우 非現實的일 뿐 아니라 無責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統一은 우리가 원하는 바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戰爭이나 革命등 民族을 분열시키고 害치는 방법으로 기도되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民族의 生存과

繁榮이 보장될 수 있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원하는 統一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自主와 國際協力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爭點과 國家들은 상호의존되고 있으며 그 결과 國內問題가 國際化하고 國際問題가 國內化하고 있다. 더욱이 韓半島는 美·日·中·蘇等 四強의 이익이 교차하는 戰略緩衝地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反美와 排他主義는 韓國의 安保와 民族統一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自主的인 노력과 周邊國家들과의 國際協定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兩者를 잘 조화하여 슬기롭게 民族統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950 年에 北韓이 전쟁을 도발했고 이 侵略을 저지하기 위하여 美國은 군대를 파견하였다. 1953 年 以後 美國은 韓·美防衛條約을 체결하고 또 다른 전쟁을 抑止하기 위하여 韓國에 美軍을 주둔해 왔다. 따라서 우리 國軍이 단독으로 전쟁을 抑止할 능력을 가지며 만약 이 抑止가 실패했을 경우 自主的으로 나라를 防衛할 능력을 가진다면 美軍의 존재가 不必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美國과 美軍의 도움으로 이 땅의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만약 北韓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中共과 蘇聯이 그것을 지원할 때도 우리는 美國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安保協力과 더불어 韓國輸出의 40%가 美國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다. 더우기 美國은 우리의 統一 및 外交政策을 일관성있게 지지해 왔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다 對等한 입장에서 美國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自主外

交는 꼭 실행해야 하지만 排他主義적인 反美感情을 고취하는 것은 우리의 國家利益에 損傷되는 것이다.

한편 韓國의 國民總生産中 약 80%가 對外貿易에 의존하고 있는 이때 우리 國民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國際協力은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協力は 中共 및 蘇聯과도 시도되어야 한다.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南北韓間에 合意를 이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지를 주변강대국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을 때 韓半島의 再統一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非政治化와 超黨的 視角

비록 기타문제에 대하여 尖銳한 대립과 갈등을 갖더라도 統一問題에 관한 한 그것을 政治化하지 말고 超黨的이고 舉國的인 視角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차원에서 統一問題를 인식한다면 그것을 黨爭化하거나 政治化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統一을 政治的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진실로 民族的인 차원에서 보자는 뜻이다.

사실 統一에 대해서는 政府나 國民, 與黨과 野黨이 갈등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언필칭 統一問題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다 水平的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장려하여 黨派와 政治를 초월한 새로운 合意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새로운 世代와 階層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념과 감상에 의한 統一意識을 가지면 그럴수록 책임있는 指導者나 政黨들은 이 문제를 政治化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젊은 世代와 사심없는 對話와 說得을 몸소 주도하여 世代, 地緣, 派閥 및 심지어 이데올로기까지 초월한 統合的인 民族主義의 차원에서 보다 협동적인 統一戰略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民族共榮體의 形成과 統一展望

지금까지의 논의에 입각하여 統一은 南北韓이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民族共榮體」를 형성할 때 그 전망이 밝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여기서 民族共榮體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安保, 國際的인 위치 및 위신, 經濟發展 및 正統性이 共同으로 보장되며 一方이 他方을 희생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相扶相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視角에서 統一의 현실적인 전망은 먼저 南北韓이 平和共存하고 協商과 交流를 통하여 協力을 모색하며 民族的인 차원에서 화해하고 經濟交流를 성사시켜 共同繁榮을 도모한 뒤 마침내 民族自決原則을 따라서 再統一에 同意할 수 있는 것이다.

### (1) 平和共存

南北韓도 현재의 軍事對決을 지양하고 戰爭再發을 막기 위해서는 平和共存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目的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의 過程으로서의 統一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이 반도에서는 비록 하나의 民族이지만 엄연히 두 개의 國家가 존재하고 있고 양자는 軍事 및 政治的인 대결 상태에 있다. 따라서 양자간에 緊張을 완화하고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共存의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平和共存을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實現하려면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信賴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려면 무엇보다도 不可侵協定이나 기타 형태의 同意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周邊强大國이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南韓만의 安保 뿐만 아니라 北韓의 安保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며 결국 양측간의 協商과 合意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民族安保는 오늘날 東北亞에서 美·日·中·蘇間에 재편되고 있는 力學關係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범세계적인 또는 지역적인 세력다툼에서 韓半島가 다시 그 쟁점으로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南北韓 어느쪽도 強大國 이익의 祭物이 되지 않고 같은 民族으로서 生存하기 위해서도 實質的인 협정에 의하여 平和共存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2) 南北協商과 協力

葛藤을 해소하고 信賴를 회복하는 일은 南北協商과 協力を 制度化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南北對話는 대체로 宣傳과 工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 이것이 실질적인 協商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것이 실현될 때 참된 協력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協商은 國際社會에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지양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韓國側이 우월한 위치에서 北韓側의 입장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한편 그들이 企圖하는 戰爭이나 革命을 抑止하는 대국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를 필자는 다른데서 「先制讓步」 또는 「受容的 抑止」戰略이라 설명한 바 있다.<sup>2)</sup> 이제부터는 南韓側이 이렇게 관대한 태도로 北韓을 개방하고 國際社會에 유치하여 「코리아」의 위신을 공동으로 提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이에 대해서는 安秉俊, 「國際環境의 變化와 民族統一」(서울: 正音社, 1986), P.90 및 PP.245-246 參照.

### (3) 經濟交流과 共同繁榮

南北韓이 공동으로 繁榮하는 棼경은 경제교류와 협력이다. 이미 東西獨은 상당한 정도로 경제협력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中共과 臺灣도 貿易과 人的交流를 증대하고 있다. 현재 北韓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단 南北協商이 성사되면 경제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南北韓이 기타 국가간과 같이 關稅와 信用狀을 개설하지 않고 民族的次元에서 物품과 용역 및 기술을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타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심지어 蘇聯도 西方國家들과 이제 經濟交流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中共과 베트남도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 北韓만이 영구히 經濟的인 落後性에서 머물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南北經濟協力은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政治的인 制約이 완화될 때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88年 올림픽을 치른 뒤에는 北韓이 현재의 食糧難과 技術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시급히 원할 것이다. 이 경우 南韓과 經濟交流를 개시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人道主義的이고 同族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韓國側이 주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民族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협력을 성공시키는 것은 民族和解의 棼경이 될 것이다. 西獨이 東獨에게 차관과 원조를 제공하며 기술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韓國도 中共 및 蘇聯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北方外交를 성공시키는데 있어서도 南北韓間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그것이 民族共榮에 직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4) 民族自決과 再統一

民族이 平和적으로 共存하고 협상을 통하여 協力하며 경제적으로 共榮하게 된다면 民族自決原則下에 정치적인 타결을 거쳐서 종국적으로 再統一을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統一은 南北韓當者들이 직접적인 협상을 거쳐서 民主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실현될 것인지는 양측간의 합의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民族構成員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되는 民主적인 방법으로 再統一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統一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어진 현실을 감안할때 일정한 순서를 따라 漸進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비록 이것이 지나치게 느리고 견디기 어려운 展望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긴 眼目에서 위에서 열거한 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建設적인 努力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統一로 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統一論議에 대하여 새로운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고 民族共榮體의 형성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겠음 우리들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民族興隆의 길이 트일 것이며 마침내 民族의 비원인 祖國統一의 展望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 Ⅱ. 對北包容政策의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目

次

|                           |    |
|---------------------------|----|
| 1. 包容 不可能範圍 .....         | 23 |
| 2. 包容 可能範圍 .....          | 28 |
| 3. 包容政策의 必要性 .....        | 33 |
| 4. 包容政策의 方向과 姿勢와 展望 ..... | 37 |

## 1. 包容 不可能範圍

南北韓 關係에서 韓國이 北韓의 것을 包容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包容이나 寬容 또는 收斂이라는 名分으로 北韓의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다가는 北韓의 對南革命戰略戰術에 말려들어 韓國의 赤化를 自招할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韓國이 南北韓 關係에서 기본적으로 包容할 수 없는 것은 南韓의 自由民主體制 存立을 위협하는 北韓의 共產主義體制와 思想이다. 韓國이 統一을 民族的 課題로 삼으면서도 北韓의 共產主義를 包容할 수 없다고 할 때 그것은 論理上 自家撞着에 빠진다는 감을 금할 수 없게 한다. 韓國이 「民族和解」에 바탕하여 統一의 法을 모색한다면 北韓의 이데올로기이며 體制인 共產主義를 包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데서 그렇다.

실상 韓國의 統一政策은 共產主義와의 統一을 추진하면서도 그 共產主義를 거부하는 自家撞着에 빠지는 論理的 모순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自家撞着은 統一過程에서 발생하는 過渡期的 現象일 뿐, 종국적 統一段階에 이르러서는 해소된다.

韓國의 統一政策은 民族和解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和解에 의한 것이지 一方에 의한 병합이나 점령 또는 흡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和解에 근거한 南北韓 統一은 서로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認定하는데서 출발한다.

南北韓의 統一 접근이 서로 상대방의 實體를 認定하고 있다는 것은 南北韓 최초의 統一原則 合意文書인 “7.4 南北共同聲明”에서도 뚜렷하게 밝혀져 있다. 이 성명에서는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의

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sup>1)</sup>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實存的 存在를 인정하면서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라는 대목은 양측이 '마탕하고 있는 思想과 制度 따위를 포기하고 서로 상대방 것을 受容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思想과 制度의 차이를 實存的 存在로서 인정하면서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思想과 制度의 차이 때문에 不信 속에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思想과 制度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며 民族的 同質性 회복에 노력하자는 것이다.

北韓측도 南北韓의 思想과 制度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統一을 모색한다는 데서는 적어도 名分上 韓國과 똑같다. 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이외에도 1980년 10월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통해 명백히 밝힌 바 있다. 北韓은 南과 北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聯邦共和國을 창립하자고 선언하였던 것이다.<sup>2)</sup>

따라서 南北韓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호 자신의 思想과 制度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韓國으로서는 自由民主體制를 해친다면 共產主義를 包容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1) 한국일보, 1972년 7월 5일자.

2) 內外通信編, 南北韓統一政策要覽(內外通信, 1986), p.57.

사실 南北韓이 統一의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不信과 緊張이 고조돼 끝내는 피비린내 나는 同族相殘의 비극을 다시 볼고 올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統一過程에서 각기 思想과 制度를 인정한다는 것은 不信과 緊張을 해소해 가며 統一의 接點에 이를 때까지 民族同質性을 회복해 나가자는 過渡期的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過渡期的 조치로서 韓國은 自由民主體制 存立을 해치는 共產主義 思想과 理念을 包容할 수 없을 것이며 北韓도 마찬가지로 共產體制存立을 해치는 自由民主體制를 包容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양측은 體制의 安全保障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선별적으로 包容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둘째로, 南北韓 관계에서 韓國이 北韓의 것을 包容할 수 없는 부분은 對南革命戰略戰術의 일환으로 고안된 對南統一方案과 韓國의 自由民主思想 및 制度를 거부하는 내용들이다. 예컨대 '80년 10월 제안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과 '82년 2월 내놓은 南北政治人聯合會議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두 제안들은 韓國을 赤化하기 위한 수단인 일환으로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韓國의 思想과 制度를 철저히 부인한 '대표적 사례이다.

北韓은 高麗民主聯邦制案을 가리켜 統一時까지의 過渡體制가 아니요, 「완성된 統一國家形態의 聯邦制」라고 하지만<sup>3)</sup> 제안내용에 따르면 완성된 統一國家形態는 결코 아니며 두개의 國家聯合體도 아니다. 高麗聯邦制案은 過渡期的 機構성격을 띄고 있으나 그것으로써는 聯邦形態의 國家를 형성할수 없는 골격을 지니고 있다.

---

3) 위와 같은책.

뿐만 아니라 高麗民主聯邦制案은 前提條件으로 韓國의 思想과 制度를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 前提條件은 南朝鮮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의 폐지, 民主主義的 政權으로의 교체, 對美平和協定締結, 駐韓美軍의 철수 등을 내걸고 있다.<sup>4)</sup> 이 前提條件들은 분명히 韓國의 統治實體를 무시하고 赤化革命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南北政治人聯合會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제의는 祖國의 統一을 위하여 協商기구로서 南北韓 및 海外政治人들의 聯合會議를 소집하자고 하였다. 여기에 참가할 정치인은 100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은 100인 政治人聯合會議를 제안하면서 「南朝鮮의 政黨團體들이 현 執權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조건에서는 그들 역시 統一協商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 제외시켰다.<sup>5)</sup>

南北政治人聯合會議는 이처럼 南韓의 既存政黨들을 제외시킴으로써 南韓의 政治的 實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것은 南韓의 思想과 制度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서 마땅히 包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째로 南北韓 관계에 있어서 韓國이 北韓의 것을 包容할 수 없는 것은 韓國의 統一目標과 方法에 위배되는 사안들이다. 韓國의 統一目標은 '82년 1월 22일 全斗煥大統領의 國政演說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統一目標은 民族, 民主, 自由, 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 실현에 있으며 統一方法은 平和에 있다고 했다. 筆者는 民族, 民主, 自由, 福祉라는 4개의 요목에다 繁榮이라는 대목을 첨가시키고자 한다. 統一의 理想에는 반

---

4) 위와 같은책.

5) 위와 같은책, p.59.

드시 民族的 繁榮과 經濟的 繁榮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렇다.

統一의 理想的 目標과 方法은 統一의 基本노선을 제시한 것으로서 抽象的인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民族, 民主, 自由, 福祉, 繁榮, 平和는 統一國家 형성을 위해 빠지지 않는 안될 요소들이라는데서 이들을 거부하는 統一은 包容될 수 없는 것이다.

## 2 . 包容 可能範圍

南北韓 關係에서 韓國이 北韓의 것을 包容할 수 없는 최후 마지노 線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北韓의 共產主義 思想과 制度, 둘째, 北韓의 對南革命戰略戰術의 일환으로 고안된 對南統一提案과 韓國의 自由民主 思想 및 制度를 부정하는 내용, 셋째, 韓國의 統一目標와 方法인 民族, 民主, 自由, 福祉, 繁榮, 平和를 거부하는 행위등이 韓國으로서 包容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韓國의 安保를 위협하는 것도 包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韓國이 北韓과의 關係에서 包容할 수 있는 내역들은 저와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들을 벗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이 요건들에 직접 저촉 되지 않는 한 韓國은 北韓을 大兄의 立場에서 크게 包容해야 한다.

韓國은 자신의 安保를 저해하는 北韓의 共產主義 思想과 制度를 받아들일 수 없고 對南革命戰略戰術의 일환으로 연출되는 제안들을 包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같은 제한 속에서도 韓國이 大兄으로서 北韓과의 關係에서 包容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政治, 經濟, 文化로 세분하여 보완되어야 할 대목들을 고찰키로 한다.

첫째, 政治的 包容문제와 관련, 보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北韓의 연이은 제안에 대한 韓國의 包容的 受容態勢 결여이다. 韓國은 그동안 北韓이 특정한 문제를 들고 제안해 오면 그것을 거의 條件反射的으로 거부해 왔다.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制案에 관해서도 韓國은 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렸다. 물론 高麗民主聯邦制案은 이에 지적인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 엉성한데다 前提條件이란 것이 붙어있다고 했다. 이 안은 南韓 赤化를 위

한 분위기 조성에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高麗民主聯邦案에는 흥미로운 것이 없지 않다. 「高麗」라는 것과 「聯邦制」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高麗라는 이름은 朝鮮朝 前王朝였다는 것 외에도 英語로 KOREA의 표기로 통하고 있다. 그래서 高麗는 國際적으로 익숙한 단어일뿐 아니라 國內적으로 설지 않은 이름이다. 大韓民國이나 朝鮮이란 國號 이외에 제 3의 명칭을 따다면 高麗라는 것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은 聯邦이라는 제도이다. 北韓의 聯邦案 그 자체는 결령하기 이룰데 없는 것이지만, 聯邦이라는 명칭만은 웃어넘기기 어려운 뜻을 담고 있다.

원래 聯邦國家들의 특성을 보면 유고슬라비아나 蘇聯의 경우처럼 여러 民族들이 각기 自治州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聯邦을 이루고 있다. 美國의 聯邦制度도 각기 自治州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랍聯邦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두개의 國家가 느슨한 상태의 國家聯合을 이루는 수도 있다.

聯邦制의 이와같은 성격을 상기한다면 北韓이 들고 나온 聯邦制라는 이름 자체는 일단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족한 것이다. 두개의 각기 相異한 體制를 하나로 묶는 國家形態로서는 역시 聯邦制라는 것이 근사하게 들린다는데서 그렇다.

두개의 政府를 하나로 統一시켜가는데 聯邦制가 쉽게 떠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 1987년 10월 蘇聯측에 의한 東西獨 聯邦制 구상이란 보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은 東西獨 聯邦가능성을 포함한 獨逸의 장래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그



것이다.<sup>6)</sup>

韓國은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制案을 접하였을 때 包容性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옳았다. 北韓측 聯邦案은 이성해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前提條件은 韓國을 赤化하려는 책략에 불과한 것이지만, 高麗聯邦이라는 이름만은 그런대로 살만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해서는 韓國측이 좀더 두고 검토하겠다는 여유를 보였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包容性있는 접근이요, 合理性을 담고 있는 對應策이라고 사료된다.

韓國이 包容性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면 聯邦制라는 이름을 韓國이 발전시켜 보다 나은 韓國式 聯邦制를 고안해냄으로써 國內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또 그렇게 하였다면 韓國의 對北韓 접근이 보다 合理的이며 包容的이라는 평가를 周邊民族들로부터 받았을지도 모른다. 高麗聯邦이라는 이름만을 韓國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韓國의 安保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며 共產主義 思想과 制度를 受容하는 것도 아니고 韓國의 統一目標인 民族, 民主, 自由, 福祉, 繁榮, 平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더더욱 그렇다.

韓國이 구태여 「高麗聯邦」이라는 이름까지 敵對視하는 태도는 아직도 韓國의 對北韓관계가 冷戰論理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漢陽이 무섭다고 해서 果川부터 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 것을 모두 부정하다보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미리부터 부정해버리는 타성이 붙게 된다.

둘째로, 經濟的 包容문제와 관련, 보완되어야 할 것은 韓國의 經濟發展을

---

6) 朝鮮日報, 1987年10月6日字

北韓과의 관계에서 包容性있게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韓國은 '84년 北韓이 제공한 水災物資를 과감히 받아들임으로써 韓國의 經濟的 自信心을 국내외에 보여 주었다.

그러나 韓國의 水災物資 引受는 被動的인 包容性에 불과하였다. 北韓측이 제공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받아들인다는 被動的인 반응 그것이었다.

근년 韓國의 經濟成長을 全世界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韓國은 北韓과의 經濟會談에서 보다 包容性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안는다. 뿐만아니라 韓國은 北韓에 外換借款供與를 제의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한다.

北韓은 그동안 外換부족으로 국제적 수모를 당해왔다. 이런때 韓國이 外換차관을 공여한다면 南北韓住民의 환영은 물론이거니와 債權國의 호응 또한 적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債權國은 부도로 끝날 뻔했던 돈을 韓國의 對北韓 차관공여로 일부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韓國의 對北韓 外換供與는 韓國經濟에 마이너스만 自招하는 것도 아니다. 韓國은 輸出 초과로 海外要因인플레에 직면, 고민한 바도 있으므로 北韓에 外換을 얼마간 차관해 준다고 해도 韓國經濟는 옛날 같은 부담을 받지 않는다.

韓國의 經濟수준이 西獨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도 西獨이 그동안 東獨에 마르크를 차관해주는 大兄다운 모습을 韓國은 참고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東獨의 경우는 北韓처럼 對外債務 불이행으로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西獨은 對東獨 마르크차관에 나서고 있다.

세째로, 文化的 包容문제와 관련, 제기 보완되어야 할 점은 北韓의 현실

에 대한 國情 보도제한과 拉致 또는 越北 作家作品의 금지문제이다. 韓國은 그동안 北韓의 현실에 관해 경제적 낙후를 비롯 否定的인 면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 또한 冷戰論理時代의 잔영이라 하겠다.

韓國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특정부문에서는 경제적으로 北韓에 뒤져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韓國은 北韓의 어두운 면만 부각시키지 않으면 韓國보다 낫다는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韓國은 北韓의 生活相과 비교가 안되리만큼 急成長했다. 이러한 때는 北韓의 밝은면도 서서히 공개해 가도 무방하리라 믿는다. 韓國國民에게 「알 權利」를 터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더 중요한 것은 北韓에 대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요구되며 政府의 信賴度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목이라 하겠다.

한편 韓國은 拉致 또는 越北 作家의 作品을 대부분 판매금지하고 있다. 1987년 10월 16일 현재 판매금지 적용 대상 서적은 780種에 이르고 있다. 政府는 이중 180種을 제외한 600種을 출판금지대상에서 제외,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sup>7)</sup> 拉致·越北 作家들의 作品들도 가능한 開放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7) 中央日報, 1987年 10月 16日 字

### 3. 包容政策의 必要性

오늘날 民主化의 여정에 들어서 있는 韓國의 內政이나 分斷國 東西獨 그리고 臺灣·中共간의 和解 움직임을 감안할 때 韓國의 對北包容政策 또한 달라져야 함을 절감치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空想的 또는 幻想的 統一論이 난무한지 오래며 근년에는 民衆統一論이 대두되기도 하였고 共和國聯邦制家이라는 것도 제기된 바 있다. 國內政治의 民主化 추세에 따라 統一論議도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키 어렵지 않다.

東西獨의 경우 에리히 호네커 東獨共產黨書記長의 分斷後 최초의 西獨訪問이 결행되었는가 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側에 의한 東西獨聯邦制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밖에도 東獨은 東西獨 장벽을 넘어 西獨으로 탈출하는 東獨人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 왔으나 호네커의 西獨訪問 이후부터는 총격을 금지하였다.<sup>8)</sup> 한스 포겔 西獨 社會民主黨 黨首가 호네커의 西獨 訪問時 그에게 東獨 탈출자에 대한 射殺 명령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sup>9)</sup> 호네커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中共과 臺灣의 관계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臺灣當局은 지난 38년간 실시해 온 自國人들의 中共本土 방문 금지조치를 10월 폐지하였다. 臺灣 기업가들은 『政府가 本土 방문금지를 해제한다면 臺灣海狹을 통한 무역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부풀어 있다.<sup>10)</sup> 臺灣과 中共간의

---

8) 東亞日報, 1987年9月10日字

9) 한국일보, 1987년9월10일자

10) 東亞日報, 1987年9月25日字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9월 臺灣의 自立 晚報 記者인 李永得과 徐璐는 本土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다. 이들의 本土取材는 臺灣人の 本土旅行 금지조치가 해제되기 전 단행된 것으로서 實定法 위배의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中共·臺灣간의 人的交流를 크게 촉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中共은 本土의 친척방문을 허용한 臺灣의 조치와 관련, 臺灣 방문객들에게 항공료 할인등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1987년 10월 16일 밝혔다.<sup>11)</sup>

한편 美國은 1987년 3월 北韓外交官과의 실질대화를 허가한 이후 제 3국 외교관도 섞여있는 「中立的 環境」에서 수차례에 걸쳐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韓國戰爭이후 냉각되었던 美·北韓關係에 解氷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外國新聞의 보도도 있다.<sup>12)</sup>

그런가 하면 日本은 北韓과 公式 접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 日本은 北韓에 억류중인 日本선박 제 18호 후지산(富士山)호의 선장 및 기관장의 석방 論議를 위해 北韓側이 제안한 「양국 해당기관에 의한 공식협약」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sup>13)</sup>

이와같은 國內外情勢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고 굳어져 있는 것이 있다. 北韓의 金日成 偶像化와 對南赤化策動이 그것이다. 여기에 韓國의 對北 包容政策의 한계가 노정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韓國쪽에서 北韓측에 대고 包容과 寬容을 크게 베푼다 해도 北韓이 거기에 호응해 오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對南赤化術策으로 惡用한다면 韓國의 安保만을 위협스런 경지

---

11) 한국일보, 1987년 10월 17일자

12) 한국일보, 1987년 10월 17일자

13) 東亞日報, 1987년 10월 6일자

로 자초하는 결과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韓國의 對北包容政策이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北韓측의 굳어져 있는 속성에 연유한다. 그런 경우 韓國이 北韓에 대해 包容과 寬容의 범위를 확대해 준다 해도 北韓으로서는 오히려 韓國의 善意를 惡用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韓國 자체의 安保를 풀어헤치는 위험을 수반할 따름이라는데서 그렇다. 그로 인해 冷戰論理는 南北韓關係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南北韓의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韓國은 經濟的 기적을 통해 先進國의 문턱에 이르렀다. 對外貿易이 黑字로 돌아섰음은 물론 先進國서도 韓國의 技術導入要請이 늘어나고 있다. 開發途上國과 先進國의 주요 기업들이 韓國으로부터 철강, 비료, 고무제품, 엔지니어링제품, 플라스틱테이프, 필름, 전기전자, 수송기기, 광업, 건설관련기기 등의 도입을 希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4)</sup>

韓國은 經濟發展으로 그치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美國大統領의 말대로 韓國에서는 「民主主義에로의 전환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부할 만하다.<sup>15)</sup> 韓國의 民主化는 韓國의 對北包容政策의 폭을 크게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韓國이 對外包容에서 보다 적극적일 수 없었던 것은 國內體制의 硬直性에도 원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韓國의 內政이 冷戰論理로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北韓과의 관계에서만 和解論理로 包容政策을 적극

14) 한국일보, 1987년 10월 17일자

15) 東亞日報, 1987년 9월 22일자

펴나간다면 國家의 基本政策에 혼선이 일고 그에 따라 社會的 혼란도 면키 어렵다. 그러나 冥冥상부하게 「民主主義에로의 轉換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터이므로 北韓에 대해서도 包容政策의 폭을 넓힐 수 있는 國內與件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韓國은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서울올림픽에는 비록 北韓이 不參한다 해도 中共과 蘇聯을 비롯한 公産국들이 거의 다 參加할 것이 어떤 異變이 일지 않는 한 確실히 된다. 서울올림픽에 公産국가의 國歌가 울려 퍼지고 公産국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國民적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고 할 때, 韓國人의 公産주의에 대한 생각은 적지않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硬直性에서 柔軟性으로 그리고 경제심에서 화해의 마음으로 移轉되어 가리라는 것 그것이다. 그러므로 88 서울올림픽은 韓國의 對北包容政策을 수용케 할 수 있는 國民的 基盤을 마련해 준다고 하겠다.

#### 4. 包容政策의 方向과 姿勢와 展望

韓國의 對北包容政策은 우선 韓國으로서 北韓 것을 包容할 수 없는 包容不可能線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包容不可能線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韓國의 實存을 위협하는 共產主義思想과 體制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北韓의 對南革命戰略戰術의 일환으로 北韓에 의해 제기된 對南統一方案과 韓國의 自由民主思想 및 制度를 거부하는 내용들은 包容할 수 없다. 셋째, 韓國의 統一目標와 方法인 民族, 民主, 自由, 福祉, 繁榮, 平和를 거부하는 경우도 包容할 수는 없다.

최저한의 包容不可能線마저 무너진 상태에서 統一이 달성된다는 것은 暴力革命에 의한 통일, 民主와 自由를 압살한 통일, 福祉와 繁榮을 거부하고 貧困과 苦役을 강요하는 통일일 수 밖에 없다. 그런 不幸한 통일은 서두르느니 보다 6천만 겨레가 모두 民族의 傳統性에 바탕,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며 民族의 繁榮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한편 韓國의 對北包容政策 基本方向은 넓은 도량으로 北韓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주어 가며 상대한다는 姿勢를 基本으로 해야 한다. 大兄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뜻이다.

北韓 金日成集團은 6.25 南侵을 자행한 戰犯集團이다. 만약 戰爭이 韓國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2차대전후 獨逸의 「뉴렘버그 戰犯裁判」이나 日本의 「東京戰犯裁判」과 같은 것이 서울에서 거행될 수 있었다면, 金日成은 戰犯者로서 마땅히 處刑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엔군측은 6.25 戰爭 종식을 위한 休戰會談中 적어도 한가지 前提條件은



내놓았어야 했다. 休戰條件으로 金日成은 6.25를 일으킨 戰犯者로서 처벌되어야 하며 平壤의 권좌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이같은 前提條件이 받아들여져 金日成이 쫓겨났다면 南北韓은 오늘날과 같이 극한적인 상태로 대치되지 않고 크게 완화되어 있을런지도 모른다. 당시 공산측이 金日成의 제거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유엔군측은 休戰會談時 金日成을 戰犯者로 기록해 두기 위해서도 그런 요구조건을 내밀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韓國은 1972년 南北對話 成事를 위해 金日成 戰犯問題를 거론할 겨를 없이 金을 北韓側 最高責任者라고 인정하였으며, 후일 그를 南北最高責任者會談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어쨌든 韓國은 金의 과거를 包容해준 결과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를 對北包容政策의 일환으로 包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韓國政府는 어떤 기회를 잡아 金日成이 6.25 도발의 책임자로 處刑되었어야 할 戰犯者임을 명백히 하면서 그러나 南北의 緊張緩和와 統一의 기반조성을 위해 金을 상대한다는 사실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韓國의 對北包容政策 方向은 대체로 政治, 經濟, 文化의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政治的 包容方向은 包容不可能線 이내에서 가능한 한 寬容을 베푸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制案의 경우 前提條件에 대해서는 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거부하면서도 聯邦이라는名稱 자체는 韓國이 발전시켜 볼 용의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韓國이 솔선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였다라면 金大中씨에 의한 共和國聯邦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金씨의 共和國聯邦案은 사실상 內容이 없다. 共和國聯邦案은 오직 北韓의 聯邦이라

는 이름에 이끌려 변형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蘇聯 조차도 聯邦이란 단어를 東西獨 統一政府에 이용하고 나섰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經濟的 包容方向이다. 이 문제는 韓國의 압도하는 經濟力을 활용, 北韓經濟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을 基本方向으로 삼아야 한다. 北韓의 外債, 食糧難, 技術落後, 資本缺乏, 生産性低調 등을 해결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종래의 對北 經濟政策은 韓國의 經濟的 우위를 전시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韓國의 經濟는 전시하지 않아도 世界가 너무 잘 알도록 성장해 있고 여유도 생겼다. 그런 힘을 활용하여 韓國은 앞으로 北韓의 經濟를 同胞愛的 측면에서 진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方案을 찾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 진지하게 北韓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經濟的 包容方向의 基本이어야 함을 거듭 밝혀둔다.

끝으로 文化的 包容方向이 제기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에 대해서도 사실보도쪽으로 言論을 유도해야 하며 拉·越北作家的 작품을 비롯 이른바 「思想的」작품을 되도록 풀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對外的으로 北韓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이 아무리 드넓은 包容과 寬容을 베풀며 北韓에 접근한다해도 北韓의 對南革命戰略戰術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北韓은 도리어 包容의 虛를 찢러 南韓을 기습하려 기도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南韓은 包容의 虛를 찢러 넘어가리만큼 放心해서는 안되며 허약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韓國이 對北包容政策을 계속 펼친다면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民族들이 그것을 알게 되며 끝내 北韓의 良識있는 주민도 알게되리라 예측된다. 또 金日成은 올해 75세의 고령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사망한

다면 韓國이 펼쳐온 對北包容政策은 적어도 北韓內의 온건파 득세에라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金日成 이후의 南北關係의 布石을 위해서도 對北包容政策은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對北包容政策은 北韓의 硬直性으로 미루어 보아 당장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긴 안목에서의 南北關係 布石을 위한 것이므로 조심성 있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國內 民主化처럼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끝으로 적시해 둔다.